

‘車·반도체·철강’ 부담 지속… 122조 10% 보편관세 재가동

상호관세 15% 위법 판단 ‘제동’
美, 122조 10% 한시관세로 대체
車·철강 232조 품목관세 부담 여전
반도체도 품목관세·현시생산 압박
301조 조사 등 통상 불확실성 확대



경기 평택항에 선적을 앞둔 수출용 자동차들이 늘어서 있다.

/뉴시스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로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업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관세율이 15%에서 10%로 낮아졌지만 자동차를 비롯해 반도체, 철강 등 핵심 수출 산업은 여전히 기존 관세 체계에 묶여 있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워 정부와 산업계의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 10%가 미국 동부시간 오는 24일 자정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추진된 대체 관세 성격의 조치다.

법원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한국 기업으로는 ▲자동차 부문(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전자(삼성, SK) ▲화학 및 산업재(LG, 롯데, 금호석유, 한화솔루션) 등이다.

상호관세 15%가 무효화되더라도 우리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반도체·화학’은 여전히 고관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IEEPA에 국한된 것이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의 경우 아직 품목관세가 매겨진 건 아니지만, 미국의 ‘자국 생산’ 압박이 거세지는 분야다.

다만 철강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철강 및 알루미늄 쿼터를 폐지하고 모두 25% 관세로 통일했다가, 6월 4일 이를 50%로 인상했다.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산 철강과 가전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 8~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증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10% 보편관세 부가가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의회 승인을 받아 기한 연장을 하거나 일시적 중단 후 122조를 재시행하는 등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122조는 국제지불 불균형 해소를 명

분으로 내세운 10% 글로벌 관세 형태를 갖고 있다. 결국 조항만 바뀌고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압박은 유지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추후 무역확장법 301조를 활용하기 위한 조사 절차에도 착수했다. 301조는 특정 국가를 상대로 시행하는 조항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중국에 이를 근거로 2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품목별 관세 압박이 실제로 더 크게 작용했다”며 “우리나라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얽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무역법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정부 “대미투자 협의 지속”… 관세는 ‘투트랙’ 대응

상호관세 위법에도 투자협력 지속
美, 122조 15% 즉시, 301조 카드 예고
車·철강 품목관세 판결과 무관 유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협의는 예정대로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보다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한 재부와 가능성이 큰 만큼, 대미 수출과 투자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인 지난 2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판결 영향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일단 관세 위법 판결과 별개로, 한미 간 투자 협력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관세가 미 행정부 재량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공급망·투자 협력은 구조적 흐름으로 판단하

고 있어서다. 관세 위법 판결이 단기적 숨 고르기일 뿐,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자체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 관세 협상과 별도로 대미 투자 협의를 이어가면서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동맹은 강화한다

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는 15%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지만, 무역확장법 등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글로벌 관세 15%가 적용되면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가격경쟁력에 민감한 품목의 채산성 부담이 확대될 수 있고, 특정 산업이 관세 표적이 될 경우 업종별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IEEPA 관세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관세를 즉시 적용하고, 향후 수개월 내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그간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이같은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향후 미측의 추가 조치 내용을 파악하면서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측과 진행해 온 협의를 지속하면서 불확실성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3일에는 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체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관세 ‘법적 공방’에 시장 흔들… 환율·채권·금 촉각

판결 뒤 관세정책 재가동, 불확실성 확대
150일 한시·의회 변수, 지속성 불투명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지만,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국가에 15%의 관세를 재부과해 ‘관세 무기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보호무역 중심의 ‘관세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 ‘상호관세’ 무효…트럼프 ‘새 관세’ 부과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웬타일 관세’ 부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1·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했으며, 판결에 참여한

9명의 판사 가운데 6명이 ‘위법’, 3명이 ‘합법’으로 의견이 갈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불균형 극복 및 정부 적자 해소를 위해 국가별로 차등 부과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에 부과되는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을 둔 개별관세로 구성됐다. 트럼프는 각국과의 외교에 관세를 적극 활용했으며,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은 협상을 거쳐 15% 수준의 관세를 결정할 바 있다.

판결에 따라 각국에 부과됐던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위법성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종전대로 유지된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0%의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했다. 이어 다음날인 21일(현지시간)에는 관세를 법률상 최대치인 15%로 인상했다. 해당 관세는 오는 24일부터 부과되며, 대통령 권한으로 최장 15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 불확실성 확산…환율·금융시장 촉각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환율,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확산했다. 이번 관세는 최장 150일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관세 지속을 위해 미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의 ‘레임덕(권력누수)’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관세의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들은 연방정부가 그간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

BP)이 작년 말까지 부과한 관세액은 1335억달러(약 193조원)로, 현재까지 관세액은 약 1750억달러(254조원)로 추산된다.

연방정부의 재정 우려도 불거졌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통한 재정 수입 확대 등을 이유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법(OBBBA)’을 비롯해 감세안을 다수 추진했다. 관세 수입이 사라진다면 연방 정부의 적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 직후 달러가치의 지표가 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7.587까지 하락했고, 달러당 1449원 수준에 시작했던 뉴욕시장 원·달러 환율도 장중 1444.50원까지 하락했다. 미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4.09%, 30년물이 4.73%를 각각 기록하며 전일보다 상승(채권값 하락) 마감했다. 대표적 ‘안전자산’ 금 가격은 1.67% 올라 트로이온스당 5080.90달러(4월물 기준)를 기록했다.

◆ 관세전쟁 새 국면…큰 변화 없을 듯

미국과 세계 각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도 예단하기 어려워졌다. 국가별 관세가 최대 15%(품목별 관세 제외)로 제한됐고, 관세의 지속 가능성도 불투명해져서다. 특히 무역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 주요국은 셈법이 복잡해졌다.

다만 주요국들은 기존 협상 결과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부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고, 150일 이후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앞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일본은 상호관세 판결 이후에도 투자를 이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럽연합은 오는 23일 무역협상 비준 여부를 논의하는데, 수출·안보 등을 이유로 무역협상의 전면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우리 정부도 각국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살피는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은 기존 일정대로 내달 5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